

「제주 사회복지 아젠다 포럼」 제안 정책 아젠다 답변서

(답변기한 : 2026. 5. 21. , 보내주실 곳 : jejubokji@hanmail.net)

소속 정당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성명	위성곤 <small>위성곤(자명인)</small>
-------	--------	--------	-----------------------------

상기 본인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로서 「제주 사회복지 아젠다 포럼」에서 제안한 정책 아젠다의 공약 수용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I 제안 아젠다별 수용 여부

연번	제주 사회복지 정책 8대 아젠다	답변 (해당 칸에 ○ 표시)		
		전부 수용	부분 수용	수용 불가
1	사회복지예산 35% 확보		○	
2	사회복지 민·관협력 제도화		○	
3	사회복지시설 안전·환경개선 지원체계 구축	○		
4	차별 없는 종사자 처우개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		
5	사회복지현장 디지털 지원체계 구축		○	
6	누구나 누리는 돌봄과 노후준비 기반 확충	○		
7	사회서비스원 역할 재정립		○	
8	국립 사회복지사 연수원 유치	○		

II 수용 불가 및 부분 수용 사유

연번	수용불가 및 부분 수용 사유
1	<p>사회복지 예산 30% 달성을 공약에 이미 포함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높아져야 한다는 취지에 깊이 공감합니다. 제주의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타 시도에 비해 낮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p> <p>다만, 임기 내에 현행 25%→35%로 10%p 상향은 연평균 2.5%p 이상의 증가를 요구하는 수치로서, 재정 여건상 안정적 이행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사회복지 예산 30% 달성을 임기 내 목표로 삼되, 35%는 중장기 목표로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p>
2	민과 관이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복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연번	수용불가 및 부분 수용 사유
	<p>는 문제의식에 동의합니다. 상호협력과 정례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민관협력 조례(가칭)」 제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p> <p>사무국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민이 주도하는 형태인지 혹은 공무원 파견 등을 요청하는 사안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 필요하다면 민간과 충분히 협의하여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을 함께 설계해 나가겠습니다.</p>
5	<p>사회복지 현장의 디지털 전환과 맞춤형 교육·컨설팅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다만, 별도 지원센터 설치의 기존 기관과의 역할 중복 여부, 전담 인력 및 운영 재원 확보 방안 등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히 소통하며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체계를 함께 마련해 나가겠습니다.</p>
7	<p>사회서비스원의 역량 분산 문제를 개선하고 급증하는 돌봄 수요에 집중 대응하기 위해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수탁 시설의 민간 이전 취지에도 동의하나, 서비스 공백과 이용자 보호를 고려하여 시설별 여건과 민간 수탁 역량을 검토하면서 단계적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p> <p>아울러 사회서비스원이 전 도민의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함께 역할 재정립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p>

※ 안내사항

1. 답변서 서식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 ‘제주복지넷’ (www.jejubokji.net)에서 내려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각 후보가 기한 내 제출한 답변서는 통합 정리하여 공개됩니다.